



“국정원 댓글, 배후는 MB” 더불어민주당 우원식(맨 오른쪽) 원내대표가 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가정보원 적폐청산 TF가 '2012년 대선 당시 국정원이 대규모 댓글부대를 동원, 여론조작 활동을 했다'는 내용을 확인한 데 대해 이명박 정부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맹비판하고 있다. /연합뉴스

안철수 출마 강행에 국민의당 내분 격화

전대준비위 지도부 '출사퇴' 동교동계도 출마 만류하기로 安 선거운동 돌입...완주 의지

국민의당 8·27 전당대회를 앞두고 안철수 전 대표의 출마로 촉발된 국민의당 내분이 확산하고 있다. 안 전 대표 출마에 반대하는 원내외 인사들은 세 규협에 박차를 가하는 가운데 전대 준비 실무를 맡은 의원들이 출사퇴로 '실력 행사'에 나섰다. 안 전 대표도 "출마 선언을 한 후보가 완주하지 않은 전례가 없다"며 경선 완주의지를 분명히 했다.

8일 국민의당에 따르면 전당대회준비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황주홍 의원이 전날(7일) 사퇴 의사를 밝힌 데 이어 부위원장인 조배숙 의원과 홍보본부위원장이던 정성숙 의원도 이날 사의를 표명했다. 앞서

전당대회 선관위 투개표 분과위원장인 김경진 의원은 안 전 대표가 출마를 선언한 지난 3일 사퇴했다. 이들 모두 안 전 대표 출마에 반대를 표명한 인사들이다. 안 전 대표의 출마에 반대하는 원내외 인사들의 집단행동도 확산하는 추세다. 정동영·조배숙·이상돈·황주홍 의원 등 7명의 의원은 이날 오전 조찬 회동을 하고 안 전 대표 출마 저지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당 대표 경선에 도전장을 낸 정동영 의원은 "이번 전대가 국민의당이 특정한 의사와 그들로부터 벗어나 공당 체제로 거듭나는 계기가 돼야 한다"며 "(안 전 대표 출마를 촉구한) 109명 지역위원장 서명 조작 의혹과 관련해 안 전 대표와의 사전 기획설을 밝혀야 한다는 얘기도 나왔다"고 말했다.

이들은 안 전 대표의 전대 출마는 명분이 없다는 사실을 재차 확인하고 안 전 대

표의 출마 고수에 대한 대책을 모색했다. 이 자리에서는 의원들은 정 의원에게 전 정배 전 대표와의 후보 단일화 필요성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주홍 의원은 "결선투표가 도입됐지만 8월27일까지 안 전 대표에 맞서는 두 후보가 각자 경쟁하는 구도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논의가 있어 야 한다고 얘기했다"고 전했다. 장병완 의원은 "본격적인 논의는 하지 않았지만, 안 전 후보가 철회할 생각이 없다면 당연히 그 문제가 대두할 수밖에 없다"며 "전정배·정동영 둘 다 단일화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같은 생각"이라고 언급했다. 하지만, 이날까지 전 전 대표와 정 의원 측은 모두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아니다"라며 말을 아끼고 있다.

이들은 이날 밤 또다시 만나 후속대책 논의를 이어간다. 다만, 기탄없는 논의를 위해 전 전 대표와 정 전 의원은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

동교동계(김대중 전 대통령) 출신 당 고문들은 이날 여의도 한 식당에서 오찬 회동을 하고 안 전 대표의 출마를 만류하겠다는 뜻을 모았다.

황기훈 전 의원은 이날 회동을 한 뒤 기자들과 만나 "안 전 대표가 정치적·도의적 책임을 지고 이번 전당대회 출마선언을 철회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어 "정대철 상임고문이 오늘 안 전 대표와 연락해 만나서 그 부분을 전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다만, 이들은 애초 거론된 집단 탈당이나 안 전 대표 출당 등은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반면, 안 전 대표의 사실상 선거운동에 돌입했다. 그는 이날 오전 인천시당 상무위원과의 만남 후 기자들을 만나 "(내 출마를 놓고) 사당화라는 비판이 나오는 건(국민의당이) 사당이 아니라는 증거"라며 "출마 반대 의원들을 진심을 다해 거듭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

천정배 “安 출마는 국민의당 세 번째 위기”

전남 민심 탐방 중 기자회견

당 대표 출마를 선언한 국민의당 천정배(사진) 전 대표가 안철수 전 전대후보의 출마 철회를 거듭 촉구했다.

천 전 대표는 8일 전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철수 전 전대후보는 당직이 있다면 당원 소환 대상이 되어야 할 상황"이라며 "당은 물론 안 전 후보 자신을 위해서도 결단을 내려야 한다"

고 출마 철회를 강하게 요구했다. 천 전 대표는 "안 전 후보의 당 대표 출마선언은 대선 패배, 제보 조작에 이은 국민의당 세 번째 위기의 시작"이라며 "당의 소멸을 막기 위해 나왔다는 안 전 후보의 출마선언 때문에 당은 오히려 소멸의 위기로 빠져들었다"고 비난했다.

그는 "당 깨지는 소리가 여기저기 들려도 안 전 후보는 출마 결심을 접지 않고 있다"며 "급기야 어제는 '정계 은퇴하라는



것이냐?'면서 출마 철회를 절박하게 요구하는 당원들을 협박했다"고 공세 수위를 높였다. 천 전 대표는 "이번 전당대회는 대선 패배의 책임을 지고 당 지도부가 사퇴해 그 잔여임기를 채우기 위한 보궐선거"라며 "대선 패배에 더 큰 책임을 져야 할 장본인인 대선 후보가 그 자리를 차지하겠다고 나선 것을 어

는 국민이 납득하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안 전 후보가 어떠한 변명을 해도 상식에 어긋나고 염치가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안 전 후보에게 호남은 무엇인가? 존경의 대상인가, 벗어날 할 굴레인가"라고 묻고는 "호남의 경제적 낙후를 강력하게 해결해 호남의 자존심을 살리겠다"고 약속했다. 전남부터 전남 지역위원회를 돌며 당원들과 소통한 천 전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 후 전남도의회 의원, 목포와 순천 지역위원회 당원들과 간담회를 열어 지역 민심을 들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여야 국회 일정 15일 원내대표 회동서 결정

결산심사 주도권 잡기 촉각

여야는 8일 정부의 결산 심사를 위한 8월 임시국회와 9월 정기국회 국정감사의 일정 조율을 나눴다.

여야는 원내수석부대표들 간 비밀조율을 거친 후 15일 광복절 행사 후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열리는 4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일정을 결정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원활한 결산 심사를 위해 늦더라도 18일부터는 8월 국회를 시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결산심사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최소 3일, 예결위에선 7~8일이 필요한데 8월 법정기한 내에 의결하려면 늦어도 18일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20일만 국감 기간을 미리 확정해야 상임위원회 사전준비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강훈식 원내대변인은 "임시국회 개최 날짜를 18일, 21일 가운데 어떤 날이 좋을지와 올해는 추석 연휴가 길어서 국감 일정을 어떻게 가져갈지에 대한 의견을 진전에 담았다"며 "결정은 15일 원내대표 회동에서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바른정당 추호영 원내대표도 "광복절 행사를 하고 나서 의장 주재로 여야 4당

이 모이기로 했다"며 "그전에 (일정 조율을 위해) 의견을 주고받겠지만, 15일에 만나서 원내대표들끼리 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감의 경우 민주당은 추석 전으로, 야당은 추석 이후로 일정을 잡자는 입장이었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8월 임시국회 결산 심사에서 박근혜 정부의 예산 집행 현황과 관련해 '적폐 지출'이 없었는지 꼼꼼히 따져보겠다는 방침이다.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준안, 물관리 일원화 등 야당이 반발하는 현안도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등 보수야당은 결산심사 목적이 큰 임시국회를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증세 정책 등을 비판하는 무대로서 삼아 정국 주도권을 쥐겠다는 전략이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임시국회와 정기국회를 앞두고 문재인 정부의 개혁 과제를 실현하기 위한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민주당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정책위원회 차원의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초고소득자 증세, 부동산 대책, 탈원전 에너지 전환 정책 등의 입법 과제를 지원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형호기자 khh@

한국당 “고소득자 증세 검토할 수 있다”

법인세는 인상 불가 재확인

자유한국당이 정부·여당의 증세방안에 대해서 '투트랙 대응'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

법인세는 기업의 경쟁력, 일자리 감소와 직결됐다고 주장하면서 '인상 불가' 입장이나 초고소득자에 대한 증세는 검토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한국당은 우선 법인세 인상에 대해서는 자유시장경제라는 보수정당의 가치와 반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세금을 더 거둬서 정부가 직접 경기 활성화에 쓰는 '정부주도 경제 정책'의 일환이라는 것이다. 한국당은 정부가 세제 개편안을 내놓을 당시부터 법인세 인상은 기업의 발목을 잡아 기업 경쟁력을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법인세를 낮추는 세계적인 추세와도 역행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국당은 또 법인세를 인상하면 기업의 세 부담이 증가하게 되고 그 부담은 결국 모든 주주·근로자·협력중소기업·소비자에게 전가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일자리 감소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당은 같은 이유로 최저임금 인상에도 반대하고 있다.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기업에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논리다.

그러나 소득세에 대한 입장은 다르다.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담세 능력에 있는 고소득자에 대한 증세를 검토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초고소득자 증세에 대한 찬성 여론이 높다는 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김형호기자 khh@

외교부, 日 공사 불리 '독도 망언' 방위백서 항의

외교부는 8일 일본 정부가 방위백서에 13년 연속으로 '독도는 일본 영토'라는 왜곡된 주장을 실은 데 대해 주한 일본대사관 관계자를 불러 항의했다.

외교부는 이날 오후 미즈시마 고이치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로 불러 항의의 뜻을 전달했다. 김용길 동북아국 심의관이 동북아

국장 대리 자격으로 미즈시마 공사를 불러왔다.

외교부는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라는 한국 정부의 공식 입장을 전달하고, 일본의 부당한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해 강력한 항의의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부동산
중개법인

한국토지(주)

광주, 전라 추천물건

치평동 삼성화재인근 중심상가

조정가

토지 191평
건물 770평

매매가 53억

동구 금남로2가 중심상가

경매물건

토지 488평
건물 6008평

감정가 25,143,000,000
최저가 17,600,000,000

【법원 경매/공매】

토 지	일 반 물 건
▶나주 봉황면 황룡리 생산관리지역 과수원 반암마을인근 토지 3251평 감정가 270,000,000 최저가 216,000,000	▶북구 운암동 중흥아파트인근 수익형빌라 토지 110평 건물 124평 매매가 520,000,000
▶화순군 북면 서유리 서유마을인근 잡종지 토지 3473평 감정가 183,000,000 최저가 128,000,000	▶담양군 담양읍 터미널인근 로터리 중심상가 대지 144평 건물 2층 매매가 11억
▶광산구 박호동 임야 자연녹지 개발제한구역 토지 13200평 감정가 192,000,000 최저가 192,000,000	▶서구 치평동 세정 아울렛 옆 도로가 중심상가 4층건물 현재 상업 중 토지 133평 건물면적 90평 매매가 23억
▶담양군 대전면 대지리 면사무소인근 자연녹지 도시계획구역 토지 218평 감정가 34,000,000 최저가 34,000,000	▶서구 용암동 중심상가 근린시설 토지 400평 건물면적 100평 매매가 17억
	▶서구 치평동 삼성화재 인근 근린시설 현재 상업 중 토지 120평 건물 614평 매매가 38억
	▶서구 치평동 소각장인근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대지 377평 타업종 가능 매매가 17억
	▶서구 마록동 도시지역 도시철도공사 뒤편 대지 508평 건물 302평 매매가 38억 조정가
	▶서구 마록동 연화아파트 입구 126평 매매가 5억2천
	▶서구 마록동 상무한신휴먼리조트 입구 46.2평 매매가 3억
	▶담양군 대덕면 장산리 전원주택 최적지 유휴관리인근 토지 359평 평당 40만원
	▶담양군 남면 경산리 전원주택지 1층일반주거지역 무등산자락 토지 456평 3억 조정가능
	▶대양광가능 평당 2만원 강진 신전면 수양리 임야 42000평
	▶상무지구 중심상권 커피전문점 6층건물 1층 50평 5천만원 원 3500백 시설비 9천 조정가능
	▶담양군 금성면 덕성리 11필지 자연녹지 택지조성 원료 대나무 생태공원조성사업 2540평 5억 5천만원
	▶나주 금천면 오강리 자연녹지 과수원 1600평 4억

010-3070-2147

유 여사

투자금 100% 보장
부동산매도 매수환영

010-8559-8905

이용국 팀장